與 "분위기 올라온다"…'몇와 한 자릿수 박빙' 자신감 이유는

'언더독의 반란' 野 컨벤션 실효 전망…"야권 단일화 거품 빠질 것"
'샤이 진보' 기대도…"오세훈 땅 투기 의혹 심각" 여론전 당력 집중

4·7 재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박빙'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는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고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다"면서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오 후보에게 오차범위를 넘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지난 주말부터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에 대한 점검이 일부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온다. 특히 유세장에 지지자와 중도층이 몰려든다는 현장 분위기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며 "현장 분위기는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당 자체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그 결과를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국민의힘과 그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 행사 후 지지율 상승효과)'가 상쇄되고 인물론이 부각될 것이란 기대다.

오 후보는 당초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밀릴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데 이어 한 때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1위를 달리기도 했던 안 대표를 제치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에 올랐다.

전형적인 '언더독'의 반란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야권의 단일화 후광은 상쇄되고 박 후보의 개인기가 부각되면서 여권의 인물론이 야권의 컨벤션 효과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샤이 진보'(숨은 진보)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지점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박 후보 지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는 소극적 지지층의 존재다.

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샤이 진보층이 점차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면서 종국에는 박 후보의 표로 오롯이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도 판세를 뒤집을 중대 변수라 보고 있다. 특히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입회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거짓말' 프레임으로 대야(對野) 공세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훈식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심은 오 후보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지도자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수 있느냐는 인식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정의당 "김상조 경질됐지만…김의겸 보면 결국 보여주기식"

"청와대 사퇴 후 금뱃지 다시 달아…인식 문제 키워"

정의당은 30일 '전셋값 14% 인상'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데 대해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김 실장의 그릇된 선택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동안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경질과 사퇴 이후에도 자리만 바꿀 뿐 최소한의 자숙이 사라져버린 모습에서 국민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다"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청와대를 사퇴하고 다시 금뱃지를 달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어제(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직'대신 '집'을 택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질과 사퇴가 보여주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여정, 文에 '철면피' '앵무새' 원색 비난…대화 의지 접었나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에 대해 '이중 잣대'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관계에 대해 "3년 전 따뜻한 봄날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대미·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향후 북미, 남북 관계가 대화보다는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미사일 관련 발언을 두고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부부장은 미사일 발사를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하고, 한국 미사일 '현무-4' 발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우려를 자아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줘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움직임과 문 대통령 발언을 '이중 잣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남·대미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당분간 대화보다는 대결 분위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를 지켜보면서 도발 수위를 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與 "野 못 기다려…민주당 먼저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정치적 중립성 의식 "전현희 위원장, 보고도 개입도 말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 최인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요청서 및 소속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직사회의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 진행 중이지만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권익위 주도의 전수조사에 난색을 보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